

조직현장탐방 | 경남 창원시 팔용동분회

봉사없이 시민과 함께하는 조직 어려워



우리 마을,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참된 일꾼들. 경남 창원시 팔용동분회(회장 천성원·58세)에 어울리는 이름이다. 팔용동은 창원역과 창원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는 교통의

요지답게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이다. 바로 이곳에서 국민복의 정신을 심으며 국민의 행복과 국가이익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펼치고 있는 자총 팔용동분회의 활동은 유달리 돋보인다. 팔용동분회는 무엇보다도 독거노인, 장애인 등 불우이웃들을 돕는데 발벗고 나서고 있다.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인 대원노인정을 찾아 청소와 식사보조 봉사를 하며 휴지, 기저귀, 음료수 등 생활

필수품도 전달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1년 내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역신문의 단골메뉴가 되고 있다.

또한 우범지역 야간순찰도 분회를 대표하는 봉사활동이다. 창원역 앞의 유흥가에서 청소년들을 조끼귀가

야간방범 순찰 통해 '동네 지킴이' 본격 나서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 도와... 이웃사랑 실천

시키고 탈선을 미리 예방하는가하면 사회초등학교와 대상공원 일대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미아찾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도 본격화 하고 있다.

팔용동분회가 지난 2011년 3월 결성 이후 이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천성원 분회장의 활약이 매우 크다.

그는 분회장 취임 후 먼저 자문위원, 운영위원, 고문

등을 새로운 인물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월례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그리고 기존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아 분회가 지역사회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봉사조직이 되도록 독려했다.

천 회장은 1999년 창원시지부 청년회원으로 자총과 인연을 맺고 이후 도청년협의회장, 시지회 사무국장, 전국청년협의회 임원 등을 두루 거치며 조직을 발전시킨 자총의 산증인이다. 20여 년간 중앙과 지방조직의 가교역할을 하며 조직발전엔 앞장선 그의 불철주야 노력은 대통령 표창과 시장상 수상 등 적지 않은 결과와 값진 결실도 가져왔다. "회원들의 따뜻한 손길이 시민들에게 새롭게 자총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직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준 회원들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희혁 KFF뉴스 편집실장〉

통일광장 13 통일전문역량 구축

통일한국이 선택 가능한 국가형태는?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어떤 국가체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은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중 한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만약 통일한국이 단일국가의 체제로 간다면 이질적인 남북한 체제를 빠른 속도로 통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통일국가의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혼란과 행정적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일국가 체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단일국가 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통일국가의 형태라 할 수 있겠지만, 단일국가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국력과 경제력이 북한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거나, 설사 준비가 부족하다하더라도 한국의 국민들이 책임과 희생을 감내할 수 있다는 동의를 전제되어야 가능한 선택이다.

통일한국이 연방국가의 체제로 간다면 북한의 자존감과 독자성을 보호하고 남북한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방국가의 경우 과도한 권력분산으로 남북한 통합의 속도가 더디어 질 수 있다는 점과 정치적 소외와 반발로 분리 독립의 목소리가 다시 커질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문제는 통일한국이 연방국가 체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가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식 수령 독재체제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서로 잘 살아보자

는 식의 통일논의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처럼 통일 이후에도 남북 지역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각각 따로 보유하고, 남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한에서는 수령 독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식의 연방제라면 더더욱 그렇다. 북한식 연방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북한의 연방제는 미국이나 독일에서 운영하는 연방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실제로 통일을 반대하기 위한 선전구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외에 통일국가의 운영방식으로 북한의 특성을 최대한 배려해 홍콩식의 1국가 2체제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외

단일국가체제, 이상적 형태지만 희생 전제돼야 연방국가체제, 자유민주-시장경제 전환됐을 때 가능

교권과 군사권은 통일국가를 대표하는 중앙 정부가 갖는 조건에서 북한만을 특별 행정구로 설정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1국가 2체제는 군사권과 외교권을 남북한이 각자 갖지 않고 통일국가의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조건에서만 검토 가능한 방식이다. 남북이 군사권과 외교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1국가 2체제를 운영하게 되면 정치적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

통일한국이 어떤 국가체제를 선택할 것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어떤 국가체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통일한국이 독일의 경우처럼 단일국가의 체제로 간다면 이질적인 남북한 체제를 빠른 속도로 통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진은 독일통일의 시발점인 베를린장벽 붕괴 모습.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체제에 대한 논의나 고민은 각각의 체제선택이 갖는 장단점을 고려하되, 통일시기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택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결론을 내기 보다는 분단국의 통합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각의 통일국가가 선택한 국가체제가 어떠한 결과를 낳았고, 한반도에 어떤 적용가능성이 있는지를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김윤태 | 통일전략연구소장, 통일학 박사

본 기사는 <자유마당> 2018년 2월호 내용을 발췌한 것임.